

제주~서울 고속철도 다시 수면 위로

이재명 후보 “전국 KTX로…, 제주 해저터널 검토”
사업비 16조원… 서울서 제주까지 2시간26분 소요
장정에 도지사선거 출마자 등도 사업 구상 내놔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16조원짜리 해저터널 사업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여울 립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 후 김포공항 존치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선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목포, 해남, 보길도, 추자도, 제주도를 연결하는 178km 구간이다. 총 사업비는 16조8000억원으로 사업완료시 서울에서 제주까지 이동시간은 2시간 26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탄소제로 사회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의 화석연료 사용이 너무 많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내 항공수요가 제주도인데 장기적 검토 사항이지만 전국을 KTX로 연결하고 제주를 해저터널로 잇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율이 크게 들지 않고 훨씬 효율적이다. 그럴 경우 서울에서 제주까지 두시간 반 정도 걸린다. 비행기 타는 것 보다 훨씬 빠르다”며 “다만 섬은 섬으로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때문에 내부는 좀 더 치열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장정에 (사)제주주권연구소 제주해녀문화보존회 이사장도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와 본토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제주와 전라도, 경상도를 거쳐 평양과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아시아 유럽횡단 철도의 기점을 제주로 만들겠다”며 “제주가 한반도 통일을 견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이나 세계 평화·관광 수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와 전남을 잇는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7년부터 본격화 됐다.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환 제주지사는 ‘21세기 새로운 연륙교통수단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전남 지사 당시 해저터널을 의제로 선정했고, 국무총리 시절에는 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9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난해 7월 결정된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됐다.

대한토목학회회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각 대선 캠프에 전달할 ‘20대 핵심 빅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목포~제주 해저 터널을 제안했다. 목포~해남 지상 66km, 해남~보길도 교량 28km, 보길도~추자도~제주도 해저터널 73km 등 총 167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안이다. 공사기간은 16년, 사업비는 16조 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2020년 11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전남~제주 해저터널 구상에 대해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아직 결말이 안 이어졌다”며 “공항과 터널같은 국가 근본 기반시설은 그때 그때 선거의 이익에 휘둘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겨울비 머금은 매화 겨울비가 내린 23일 제주시 노형동 한 가정집 정원에 식재된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렸다. 겨울비를 머금은 꽃망울이 더없이 소담스럽다. 강희만기자

1인당 10만원…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20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다. 약 4만 1000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 예산은 41억원으로 추산된다.

각 행정사에서 지급 대상자를 27일까지 확인한 뒤 28일부터 2월 말까지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추경 심사’ 2월 임시국회 25일 개회 정부, 24일 국회에 14조 규모 추경안 제출

국회가 25일부터 임시국회에 돌입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1일 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임시국회는 25일부터 한 달 간 열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추경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요재원도 확충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온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부미현기자

6월 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액 공고 도지사 4억9400만원… 7회 선거 대비 120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선정, 21일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선거 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를 반영해 산정한다고도 선거위는 설명했다.

선거 별로 보면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4억94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7800만원,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평균 4480만원, 교육의원선거는 평균 5660만원이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1200만원,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평균 70만원, 교육의원선거는 평균 8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선거비용 제한액의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수치다.

제7회 지방선거(2014년 6월 30일~2017년 12월 31일) 당시 전국소비자물가가는 3.7%였으며 제8회 지방선거(2018년 6월 30일~2021년 11월 30일) 시기엔 5.1%로 1.4%가 높아졌다.

기존 인구 수 또한 65만7954명(2017년 12월 31일 기준)에서 67만 8378명(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만424명 증가했다.

도 선관위는 도의회의원 정수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및 지역구 도의원선거의 선거구 확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차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제주 코로나19 23일 <17시 기준>	신규 15 누적 4997
---------------------------------	--------------------------------

한라산 허벅술 720ml / 35%

마뚝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세요

고맙고 소중한 분들에게 한라산소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SINCE 1950

한라산21 360ml 6병 / 21%

한라산17 360ml 6병 / 17%

미니어처 80ml 6병 / 21%, 17%

한라산소주는 미국, 중국 등 15개국 수출을 통해 청정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체주문 문의 064.751.6671 판매처 도내 소매점, 농협, 대형마트 등

※자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